

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국내논의 결과

1. 개요

- (목적) UN 푸드 정상회의(9월)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- (일시/장소) '21.4.28.(수) 14:00~16:00 / OCC오송컨벤션센터
- (참석) KREI, 농식품부, 환경부, 농진청, 군산시, WFP, 생산자·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
 - * KREI(정은미 부장), 농식품부(식량정책과장 외 3명), 환경부·농진청·군산시 관계자, 한농연(서용석), 한국친환경농업협회(박중서), 녹색소비자연대(유미화 상임위원장), 소비자시민모임(윤명 사무총장), WFP(임형준 소장), 한살림(윤형근 전무이사), 아이쿱(김대훈 센터장), 한국정밀농업연구소(남재작 소장)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(조지혜 실장), 영남대 박재홍 교수 등 20여 명

2. 주요 논의 사항

◇ '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'를 주제로 ①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, ②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확대, ③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등 토론

- (탄소중립) 음식물 폐기물류 감축(WFP), 농업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대체(한살림),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탄소저감 인증(축산과학원) 필요성 제기
 - * 아이쿱·정밀농업연구소 등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'축산 문제' 해결 강조, 축산과학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
- (환경친화)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*(생산자단체·군산시), 환경을 고려한 적정생산 및 소비자의 자발적 친환경 소비(소비자단체) 등 강조
 - * 공공수매 및 공공급식 공급연계 확대(친농), 친환경 단지·규모화(군산시) 등
- 생산체계 전환(다품종소량→대량공급 전용 산지), 소비자 지불의사 확보 필요(농진청 등)
- (지속가능성) 농업·농촌 내 '사람*'의 유입 및 먹거리 접근성 제고(시민단체·학계·군산시), 재해보험 강화,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필요(아이쿱)
 - * 고령화 인구구조 고려 필요(정밀농업연구소), 농촌 사회 재건·재활 등 정주여건 마련(아이쿱), 청년농 육성 및 농민기본소득 도입(한살림), 지자체 푸드플랜 운영할 전문 인력 필요(군산시) 등